

월/요/광/장

임우진



올해 5·18 기념행사도 어제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30주년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급년도 행사는 파행으로 얼룩지고 관심과 열기도 낮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제는 5·18의 위상이 좀 더 성숙해질 만도 한데, 갈수록 초라해지는 느낌에서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기념식은 반쪽 행사로 치러지고, 아직도 광주만의 행사를 넘어설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민주화운동이라는 법적·역사적 평가를 부정하려는 세력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광주도 5·18의 숭고한 저항과 대동정신을 지역사회에서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분열과 대립, 갈등을 지속하고 있어 5·18 정신의 구현과 전국화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5·18 '負의 유산' 극복하려면

이러한 부정적 유산은 원초적으로 5·18을 바로 세우는 일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하는 처절한 투쟁과정일 수밖에 없었다. 데서 오는 내재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지역주의 정치 구조 속에서 시민들의 정서와 기록권에 안주해 온 지역 지배정당, 일부 5·18 관련 단체와 권력자들의 독선과 이집, 그리고 그들을 포용하고 합리적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내지 못한 지역 지도층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지로부터 민주화운동에 대해 냉소를 보내거나, 호남의 근본적인 자기성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사회가 뼈를 깎는 자기혁

신을 통하여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안세력으로서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5·18 정신의 계승과 전국화도, 민주화의 성지라는 호남의 자존심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동안의 5·18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불의에 대한 항쟁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광주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외적 투쟁과정이었던, 이제는 방향을 내부로 돌려 지역 내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자치공동체를 육성하는 일에 지역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을 호소하면서 이를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막대한 지역현실은 5·18이 남긴 負의 유산으로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책무로 답답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비난보다는 이해와 협력, 소통과 나눔을 바탕으로 지역적 과제의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함께 참여합니다.

둘째, 5·18 정신, 즉 민주·인권·평화와 대동정신을 실천하는 일은 곧 성숙된 자치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이며, 선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6.2 지방선거는 참으로 중요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지역의 정치 지도자, 5·18 관련단체와 재야 지도층 등은 5·18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기록권을 버리고 무엇이 진

정으로 5·18 정신을 계승하는 길인가에 대하여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1994년의 5·18기념재단 창립 취지문에서 밝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넷째, 내부적 투쟁은 그동안의 대외적 투쟁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범시민적이고, 범 지역적인 해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가신님들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정신-민주·정의·평화·나눔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자가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서부터 이러한 정신을 한 가지라도 실천해 갑시다.

다섯째,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5·18의 민주·인권·평화와 공동체 정신이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5·18은 법적·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학술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다양하게 재해석,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과제로 되어있는 정신의 계승과 전국화는 광주에서부터, 5·18이 남긴 負의 유산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야 공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이 부러워하는 자치공동체를 육성하고 성숙된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선배들의 정의로운 투쟁과 공동체정신을 우리 사회에 구현함으로써 살아남은 자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방선거 D-2, 후보자 꼼꼼히 살펴야

6·2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돌입하면서 각 정당 및 후보자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유권자가 8명을 뽑는 '1인8표제'다. 유권자가 선거전에 투표 방법과 후보자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고자 않으면 혼선을 빚어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그어 선거보다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6·2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간 '나와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다. 따라서 이번 선택은 '나와 가족'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정치일 것이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4기 지방선거 때 당선된 기초단체장 중 10명 중 4명 이상이 비리와 위법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경력은 따지지 않고 특정정당 후보만 무조건 찍는 '묻지마 투표' 행태에

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만큼은 4기 지방선거의 재판(再版)이 되지 않도록 유권자가 두 눈을 부릅뜨야 한다.

후보자의 경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이 당, 저 당을 옮겨다니는 철새는 아닌지, 전과는 있는지, 권력욕이나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 권력 소신이나 원칙을 헌신짝 버리듯 하지는 않았는지 후보자 과거 행적을 낱알이 따져봐야 한다.

후보들의 공약도 신경 써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표를 얻기 위한 인기영합주의는 아닌지 판단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지역, 학연, 혈연 등 사적인 인연을 과감히 끊어야 한다. 후보자 자질은 차치하고 정당만 보고 표를 주는 '묻지마 투표'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내가 사는 지역, 그리고 내 자녀 교육의 미래가 이를 후 선택에 달려 있다는 보란 무조건 찍는 '묻지마 투표' 행태에

출산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 시급하다

정부가 내년부터 도로나 오지 지역에 거점 산부인과 신설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전남 강진과 전북 무주 등 전국 20여 곳에 산부인과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 장비 구입비와 의사·간호사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30여 곳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협력 분과 병원을 지정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이동식 진찰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촌지역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기면서 산부인과도 크게 줄었다. 전남 10여 개 군 지역 산모들은 멀리 떨어진 대도시 산부인과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농촌지역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기면서 산부인과도 크게 줄었다. 전남 10여 개 군 지역 산모들은 멀리 떨어진 대도시 산부인과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구 유출이 심한 전남지역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대책을 펴왔다. 그러나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강진군이 도시 수준의 수의 보전을 약속하고도 산부인과를 유지하지 못했다. 산부인과 의사

들이 농촌지역에서 개업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 2008년 기준 1.19명으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한국인구는 지금보다 400만 명 이상 줄어든다고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미래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

정부가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던지런 정책을 내놓았다. 출산 장려금을 주기도 하고, 보육비를 지원하는 가 하면 의료비를 깎아준다고 했다. 그러나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을 없애는데 미흡한 지원책에 불과했다.

일시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다. 양육 부담은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게 맡겨져 있고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이 부모의 허리를 휘게 한다.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불편을 주는 요인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윤춘주



작년 가을 필자가 국선번호를 맡은 사건 중에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다. 아동복지법위반. 즉, 아동은 확대했다. 이유는 보육시설의 여교사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이었다.

아동학대라고 하면 영화나 뉴스에서 접하는 것처럼 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 폭력 또는 성적학대를 하는 경우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기 어려웠다.

하지만 막상 피고인들로부터 들어보니 사건의 성격은 생각과 달랐는데, 보육원의 책임자가 교사들과의 감정대립 등 심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웠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던 봉사자에서 오히려 아동학대의 범죄자로 전락한 피고인들은 명예회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로서의 생존을 위해서 재판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사무실에서 재판을 준비하면서 피고인들이 결과에 낙담할까봐 재판에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자'며 위로했다. 그러나 보육원측 증인들의 비협조로 피고인들이 아동학대로 고발된 사정을 재판부에 제대로 알리기 쉽지 않았다.

사랑의 공동체

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결심한 후 교사들로부터 아동학대를 이유로 사직서를 받아낸 것이 발단이었다. 이후 사직서를 냈던 교사들이 뒤늦게 해고의 부당성을 다루면서 민원을 제기하자, 교사들을 아동학대기관에 신고하여 사건화가 됐다.

그런데 하늘이 도우셨는지 재판 막바지에 보육원 측에서 피고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그 진정서에 피고인들을 고발하게 된 상세한 경위가 적혀 있어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선고일이 되자 국선사건임에도 긴장되었다. 가담경위가 경미한 무명의 피고인의 경우 무죄까지 선고되지 않을까 기대도 했는데, 결론은 벌금형이었고, 나머지 한 피고인도 감형되었다.

학교에서 '사랑의 매'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옳은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다. 보육원이라면 어떤 형태든 '사랑의 간섭'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을 마친 후 어느 틈엔가 내 마음속에는 작지만 소중함 희망이 생겼다. '보육원과 그 속의 아동들과 선생님들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모였단 하나였고, 지금은 서로 자신이 옳다고 나누었지만 이들을 가로막는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원래의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풀을 수 있는 하나가 다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기고

박종



오늘은 '세계금연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의 해악을 알리고, 금연을 유도하고자 1988년에 정한 날이다. 그러나 오늘도 차 안에서, 거리에서, 또 길가 차집에서 남자는 물론이고 젊은 여성들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이제는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08년 광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41.2%로 미국에 비해 약 2배 높았고, 가정에서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21.7%로 조사되어,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흡연의 해악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을 해치는 공공의 적?

담배 연기에는 4000여종의 독성화학물질과 20여종의 발암물질들이 들어 있다. 생각해보자. 하루 한 갑 흡연자라면 이러한 발암·독성물질들을 하루에 스무 번도 더 자주, 스스로, 일정한 시간마다들이 마신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꽤 깊숙이 들어간 담배 연기는 폐암을 비롯하여 우리 몸 곳곳에 암을 만들어 낸다.

최근 폐암 사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흡연으로 인한 영향 말고는 달리 설명하기가 어렵다. 또한 만성 기관지염, 중풍, 심장마비, 동맥경화증에 의한 사망을 높이고, 종면에 있어 소위 고개 숙인 남자가 될 위험성도 약 2배 증가시킨다. 간접흡연의 해악도 만만치 않다. 흡연자의 부인은 예외 없이 높은 폐암과 심장병의 발생을 보인다. 아이까지도 폐렴이나 기관지염, 폐기장에 그리고 성장한 후에도 호흡기 질환을 빈번하게 앓게 된다. 자신의 흡연으로 인해 가족까지 건강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

가? 우리나라는 담배를 처음 피우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담배 회사의 주요 목표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고, 흡연의 피해가 성인 남자에 비해 훨씬 큰 청소년과 여성에 집중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

으로 흡연 예방과 금연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금연 구역의 확대, 간접흡연 감소 정책 그리고 청소년의 금연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담배 값 인상 등을 통한 적극적인 금연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금연에 대한 굳은 의지와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여 무료 상담과 처치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흡연은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질병과 죽음으로 내모는 나쁜 행위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 공공의 적으로 흡연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경우가 있다. 흡연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빠른 지름길임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지금 당장 금연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광주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버려진 유기견이 공포의 들개로... 대책 필요

며칠 전 TV에서 개를 기르던 사람으로부터 버려진 투견종 사견이 산속에 살면서 밤마다 마을에 내려와 다른 개들을 물어 죽이고, 심지어 그 개들을 먹는 장면이 방송됐다.

개는 어지간하면 다른 개의 고기는 먹지 않는 게 특징이다. 그런데 이제는 버려진 개들이 거의 야생상태로 적응하면서 완전 야

생동물로 변신해 민가 주변으로 내려와 개는 물론이고 닭이나 송아지까지 공격해서 물어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한다.

인간의 친구인 개가 공포의 대상 들개로 변해버리는 일을 구경만 할 게 아니라 무슨 대책을 세우야 할 듯하다. <강진구·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無等鼓

신기전(神機箭)은 1448년(세종 30년) 제작된 로켓 추진 화살이다. 대나무 앞 부분에 쇠로 만든 화살촉을 달고 화살대 위에 로켓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원동력의 약통을 부착했다. 이어 폭발탄에 해당하는 발화통을 약통 위에 올려놓고 도화선을 연결해 목표지점에 가까이되면 폭발하도록 설계했다. 크기와 형태에 따라 대신기전, 산화신기전, 중신기전, 소신기전으로 나뉘었는데, 대신기전은 사정거리가 1~2km에 달했다.

로켓형 화기는 그 이전에도 있었다. 신기전은 고려 말 최무선이 만들었던 주화(走火)를 개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무기들은 명종 황제가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선제압이나 신호용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화 '신기전'에서처럼 수십~수백발이 불과 연기, 요란한 굉음을 내며 날아가는 장면은 1451년 개발된 화차 '신기전기(神機箭機)'가 가능케 했다. 직경 46mm의 둥근 나무통 100개를 쌓아 만

든 이 발사대 덕분에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병기가 탄생한 것이다.

항공우주연구원 체연석 박사팀은 지난 21일 고흥만 경비행장 활주로에서 신기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일진왜란과 영조 초기 사용된 것을 끝으로 기록에서 사라진 이후 300여년간의 복원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에서 2기의 산화신기전을 발사해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임을 증명하는데 이어 이번에는 네 가지 신기전을 모두 성공리에 발사했다. 이는 다음달 9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시될 나로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이뤄진 것어서 의미가 깊다.

한국 최초 위성발사체인 나로호의 1단은 액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반면 2단에 해당하는 김포터는 신기전처럼 고체 상태의 화약을 추진제로 삼는다.

우주 강국의 꿈을 실현 나로호 발사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홍이 넘치는 땅' 고흥(高興)에서 선조들의 노후우를 살려 반드시 나로호를 전하길. <정후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신기전과 나로호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